

국민권익위원장님께 국공립대 교수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국립대학의 교직원들이 학생지도비 명목으로 매년 1,100억원의 수당을 받고 있고, 그 중 많은 부분이 허위 혹은 부실지도에 의한 것이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권익위는 이 문제가 국립대 교직원들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경비(이하 교연비)를 급여 보조성 경비로 잘못 인식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권익위가 실시한 학생지도비 제도 개선 관련 설문조사는 학생지도비 제도 자체가 국립대 교직원들이 부당하게 누리는 대단한 특혜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이하 국교조)은 전국 18,000여 국공립대학 교수들과 함께 권익위의 이러한 인식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우려의 말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교조는 권익위의 학생지도경비와 관련한 최근의 활동이 교연비 제도의 특성과 그 역사성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익위의 행동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처우에도 묵묵히 견디며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국공립대학 대다수 교수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연비는 우리의 급여가 맞습니다. 교연비는 가난했던 시절 국가가 국립대에 대한 재정 책임을 학부모들에게 일부 떠넘겼던 기성회비의 징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중 일부 금액을 사립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교수들의 임금을 보전해주기 위해 기성회계 정액연구비로 지출한 것이 그 기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2015년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소송이 벌어지자 정부는 그 책임이 마치 기성회계 자체에 있는 것인 양 호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벌인 일이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전환시키고 급여보조성 경비를 사업성 경비로 전환시킨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다. 우리 국공립대학 교수들은 학생 지도와 상담마저도 돈을 받고 해야 하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국립대 교수들은 40이 훌쩍 넘은 나이에 임용되어서 대기업 사원의 초임 연봉에도 못 미치는 낮은 급여에 시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동일직급, 동일근무연수의 일반 공무원에 비해 연 평균 2천만원 이상 더 적은 급여를 감내해야 합니다. 이는 교수들이 받고 있는 교연비의 평균치를 기본급여로 전환시킨다 해도 3~400만 원 정도 적은 금액입니다. 또한 사립대 남자 교수가 신규 임용 후 18년 정도 걸려 사학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인 800만원에 도달할 때

국립대 남자 교수는 대부분이 정년까지 그 금액에 도달하지 못 합니다. 이 문제는 소득세는 내지만 연금에는 산정시켜주지 않는 교연비 자체의 모순에 기인한 바도 큼니다. 교연비는 또한 일반 공무원이라면 누려야 할 20여 종이 넘는 각종 수당의 혜택으로부터 국립대 교원이 제외되어야 하는 근거로도 활용되어 왔습니다. 교연비가 정말 사업비라면 연금에도 산입되는 급여인 수당에서 우리 교수들이 제외되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대부분의 주요 국립대들은 지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경제의 공동화는 가뜩이나 힘들었던 국립대학의 위상을 더욱 약화시켰습니다. 우리 국공립대 교수들은 열악한 상황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QS 세계 대학 경쟁력 지표에 따르면 거점 국립대들의 연구 경쟁력이 서울의 주요 사립대학을 능가하거나 같습니다. 하지만 젊고 유능한 교수 순으로 국립대학을 탈출할 것이라는 농담이 현실의 우려가 되어 버린 상황에서 이런 모습이 앞으로도 가능할 수 있을지 자신할 수 없습니다. 뛰어난 학자들에게 국립대학을 지켜달라고 부탁하기에도 민망한 이 상황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국교조는 국공립대학 교원들에 대한 합당한 경제적 처우가 단순한 이기적 요구가 아니라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본적 요건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업비 명목의 학생지도경비를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을 이런 말도 안 되는 편법으로 전환시킨 장본인은 바로 교육부와 정부 당국이었습니다. 학생지도경비를 포함한 교연비 제도는 처음부터 부실운용과 부작용이 예견된 제도였습니다. 우리 교수들은 이러한 학생지도경비와 같은 제도 없이도 학생들을 열심히 지도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열심히 하는 만큼 합당한 처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국교조는 18,000여 교수들의 염원을 모아 교연비의 통상 임금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의 권익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국민권익위원장님께서도 우리의 이러한 노력과 정당한 요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공립대 교수들도 고등교육의 수월성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공립대학 교원의 기본적 권익을 지켜줄 책무와 교육의 공공성을 지켜줄 책무도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위원장 남중웅 올림.